



호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구직 인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호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업체에서 면접을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미쓰비시 징용피해 배상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손배소 최종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급덕(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6면>

원심에서는 미쓰비시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그리고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판결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

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별도로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할아버지 등은 각각 8000만원을 배상받는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담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밀당' 연말까지 가나

광주시·현대차, 12월 2일까지 최종 타결엔 무리
협약서 조율 중 ...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든 결론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예산 국회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변경협약서를 만들어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시와 현대차의 판단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국비를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장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9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월 내에는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 양측을 각각 20번 이상 만났다"며 "현재 선불리 전망할 수도 없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말했다.

지역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시 협상단은 현대차와 작성한 최초 협약서에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분위기는 지난 27일부터 한층 나아졌다는 것이 이 부시장의 전언이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이하 합의문)'에서 벗어나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광주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부시장은 "예산 국회 내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된다"며 "하지만 (12월 이내에 합의가 되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도 광주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타이밍과 문구 등 하나하나가 예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넘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차-기아차 노조 등 민주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현대차 이사회와 광주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약서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튀어나오거나 협약서 내용을 놓고 지역노동계가 반발한다면 또 한번의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부시장은 "현재 초안을 갖고 일부 문구를 넣고 빼는 등 협상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협상단은 직을 단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단은 30일부터 현대차와의 다시 협상에 나선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보성 녹차·장흥 청태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며 이어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제11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제12호)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농업유산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사를 짓는 과정과 방법을 보존하는 제도다. 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정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전남도 지정농업유산 제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제11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제12호),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제10호)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한 유·무형의 농업자원 가운데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국가가 지정하는 농업유산이다.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경사지 등 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훌륭한 경관이 높이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보성의 등고선식

계단형 차밭은 부족한 농지를 대체할 생계 수단으로 산의 비탈진 면에 조성된 것"이라며 "곡괭이와 삽으로 면을 고르고 새끼줄로 등고선에 맞게 수평을 유지하며 폭 2m 간격으로 층층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은 비자나무·소나무 등 수목하층부에서 차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청태전'을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게 유지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은 금성산 고도에 따라 할아버지·아버지·손자뚝으로 이어지는 연속관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의 냉해를 방지하고자 따뜻한 상층부의 물이 먼저 눈에 공급되도록 물을 설계한 것을 말한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바지하는 자산"이라며 "단순히 보존·유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신발도유람 - 총칭
'국민관광지' 된 세종 호수공원 ▶18면
광주FC 박진섭 감독
"출경기 부진 아쉬워 내년 꼭 승격"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험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충동 876-17)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전속모델 신 구

회장 김영관